



국민 권익

역을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4 01+0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110 국민콜

정부대표민원전화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01+ 02



CONTENTS



기 / 획 / 특 / 집

- 04 김영란 위원장 인터뷰
“수십년 묵은 민원 해결엔 법관시절과 다른 희열”
- 08 2012 희망 권익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립니다
- 12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 온라인 민원 접수 1백여만 건
- 14 전문가 제언
국민권익위는 국민행복의 종결자



26



30



42



46

공 / 감 / 누 / 리

- 16 포커스
反부패 경쟁력 뛰어난 기관 정해줍니다
- 18 이슈
차상위계층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 22 우리 이렇게 일해요 - 행정심판국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행정심판 말아
- 24 글로벌 권익위
反부패시스템, 개도국에도 지속 확산

소 / 통 / 누 / 리

- 26 국민권익위가 갑니다
두드리세요! 민원이 해결됩니다
- 30 원주 조정회의 현장
주민 애로사항 씻어준 '솔로몬의 선택'
- 3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성 청간하면, 경관용 울타리로 바꾼다
- 38 따뜻한 국민권익위
나눔 펴는 '권익사랑 봉사단'이 뜬다
- 40 블로그 기자단
“국민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행 / 복 / 누 / 리

- 42 여행 | 경북 영주
부석사 노을에 빠지다
- 46 시네마 토크 | <페이스 메이커>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 48 건강 다이어리
90세 시대 즐길 헬스테크 하세요
- 50 역사속 권익
살아있는 권력 한명회를 낙마시킨 '대간의 탄핵'
- 52 컬처&컬처
대한민국이 '깔깔깔' 웃고 있다
- 54 알아주세요
국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확 낮춘다
- 55 이 한권의 책 | <말과 권력>
말의 달인들이 힘쓰는 세상
- 56 뉴스&피플
- 58 독자와의 대화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4 01+02

발행일 2012년 2월 13일
(격월간, 통권 24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 묵은 민원 해결 댄 법관시절과 다른 희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법안 만들겠다”

지난 1월 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장은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법안(法案)을 기필코 만들 것”이며,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한다. 법을 만들면 공무원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오동룡 기자/사진: 서경리 기자

김영란 위원장은 “공무원이 청탁에 대해 깨끗하게 처신하면 좋은데 모든 인력을 동원해 청탁이 들어오니 얼마나 괴롭겠느냐”며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의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알선·청탁 등 고질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북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부패인식도를 조사해 보니 공직사회에 가장 빈발하는 부패로 직위를 이용한 청탁(31%)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품수수(22%), 공금횡령(15%), 접대향응(11%) 순으로 높게 나타나더군요. 올해 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부당한 지시나 권한남용을 방지해 부패관행을 뿌리 뽑을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전 공공기관 확산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해 현재 300여개 공공기관에 구축돼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신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인의 윤리확

립과 함께 법령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직무활동에서 사적 이해관계(이해충돌) 개입을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공개·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월말경 공개토론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아울러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익위는 4년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한 조직입니다. 권익위의 통합으로 얻게 된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익위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권익구제 기능을 합쳐 국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8년 2월 출범한 한국형 권익구제 기구입니다. 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고충민원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 기능을 권익위로 통합하고, 기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권익구제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하도록 했어요. 권익위 통합으로 ‘원스톱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라는 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 셈입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의 대표기관으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처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분야별 우수 사례의 공유와 확산 등 ‘정책학습’을 통해 권익구제 업무 수준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2012년 업무에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권익위는 2012년에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첫째, 공직사회의 알선·청탁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외부 강의 대가 지급과 연계된 유착 소지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권익위 직원은 작년말부터 청렴교육 외부강의 대가를 일절 받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연간 280여만 건의 민원을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분석, 부처에 제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권익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생활 속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는 50개 지역에서 300건 이상의 민원 해결을 목표로 대폭 확대하고, 다수기관 관련 민원, 해묵은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도 연간 3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생발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먹거리·휴대전화 등 실생활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분야, 노령세대 생활안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다문화 가정, 주거취약 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어떻게 운영돼 오고 있습니까.

“권익위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핵심가치로 삼고, 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대표적인 현장민원 상담제도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85개 지역을 방문해 6,48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오래된 집단민원이나 여러 기관이 관련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같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조정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40세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주거비, 일자리, 보육분야에서 2040세대의 고충을 수렴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권익위는 주거비, 일자리, 보육 등 2040세대가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집중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거비와 관련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구간 변동으로 세입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는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관”이라면서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 추진도 권익위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 수수를 추방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창업지원 제도와 청년 인턴십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부서 간 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육 문제는 보육시설의 안전기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학원 유치부 등 유사 어린이집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육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관련 안전사고·불법운영 등 1만 2,80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민생활 분야 못지않게 전자상거래, 상조서비스 등 신생 업종 분야들이 법의 사각 지대에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2010년 전년 대비 22.6% 증가해 총거래액이 824조원이 되고 IT기술 발전에 따라 공동구매 중개(social-commerce) 등 새로운 소비 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교환, 배송 중 물품 파손 도난에 따른 배상문제, 사이버 몰을 이용한 사기 피해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발굴해, 업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장례문화가 상조업체의 장례대행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상조보험 가입자 수가 약 355만명으로 대중화됐습니다. 지난해 5월

현재 상조회사는 300개로 급증 추세입니다. 상조업체의 고객 상조보험금 횡령,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지연 등 가입자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부당행위로 고충민원이 지난해에만 1,769건입니다. 이 용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노령세대의 노후불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연금수급 개선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3,442개소) 운영과정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설운영, 부당 급여를 청구해 편취하는 문제, 시설 수용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서부터 관리·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연금수급 고충민원이 지난해 4,097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연금대상 결정시기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돼 신청자가 생계 곤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고, 광부 등에 대한 특수직종 조기연금 제도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신생 위험직업의 등장 등 사회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충민원·국민제안 등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운영된 지 넉 달이 돼 갑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석달 동안 총 29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

됐고, 지난 1월 20일까지 접수된 신고까지 합하면 3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철도안전 위반, 철도교량의 하부보강 부실시공, 화장품 허위광고 등 약 30건이 관계기관으로 이첩되었고, 140여 건이 송부됐어요. 지난해 말에는 ‘KTX 결함사고 관련 자료유출로 해고·정직 처분된 직원 2명을 원상회복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라는 정신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있어야 그 대책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듣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을 두고 OECD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올해의 반(反)부패뉴스 1위’로 선정했다”고 귀띔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대법관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권익위원장 업무가 대법관보다 훨씬 역동적”이라면서 “권익위원장은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을 뛰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강릉 사천 해변 경계철책 철거 등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해결했을 때, 그 기쁨은 법관으로서 느껴 보지 못한 희열”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과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1월 11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 권익위 상담팀과 함께 방문, 지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올해 4대 중점과제 추진...
희망·행복은 'up', 불편·갈등은 'down'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정책추진 목표다.
따뜻하고 깨끗한 나라로 향하고자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한 곳에서, 한 발 앞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권익위의 2012년 희망 계획이 여기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2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점 만점에서 3.4점, 즉 100점 기준이면 68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정치·경제적 이유'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업률·고용불안 48.2% ▲부정부패 만연 42.0% ▲양극화 증가 36.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국민권익위원회도 올 한해 동안 정치·사회·경제적인 불안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실현'이란 목표 아래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한 국민의 소리 실시간 반영 ▲찾아가는 권익구제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불편 해결 ▲공직사회 알선·청탁관행 개선 ▲경제살리기와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권익위가 이와 같은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보였듯이 불안과 위기 속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권익구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어진 공직사회의 부패사건과 함께 앞으로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가 치러져 공직윤리 확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유럽 재정위기와에서 파생된 글로벌 경제위기도 한 이유다.

갈등지수 높은 사회에 세대갈등 등장

권익위는 올해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 실시간 반영'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인터넷 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의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높은 가운데 변화욕구가 높아진 2040세대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가 바라본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가 30%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으며 다음은 교육비 28%, 주거비 27%, 보육비 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갈등지수는 그리잖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이와 같은 권익위의 2012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권익위의 각 실·국은 1월 초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조정실 | 쌍방향 전자공공토론으로 실시간 국민 여론 반영

먼저 기획조정실은 올해 ▲권익위 기능발전과 업무조정 내실화 ▲실·국의 업무성과 극대화 지원 ▲깨끗한 공직문화, 일하고 싶은 조직 ▲국제협력 강화로 국격제고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신문고의 쌍방향 전자공공토론이 가능하도록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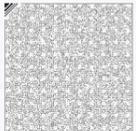
또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에 대비해 협약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된 OECD 뇌물방지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도 수립한다. 더불어 오는 5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음부즈만협회(IOI) 훈련프로그램, 오는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IOI총회에 국민신문고 등 권익위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한국의 반부패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고충처리국 | 국민불편과 사회적 갈등에 선제 대응

고충처리국은 '국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고충해결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갈등 조정역할 확대 ▲고충민원 사전예방 정책기능 확대 및 강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고충처리국은 고충민원에 '표준서비스제'를 도입해 민원인의 체감만족도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며, '고충처리 달인제'를 도입해 달인으로 선정된 조사관에게 포상·인사·성급급 등에서 우대함으로써





조사관들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도 추구한다.
이밖에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충민원의 정책총괄 기능을 권익위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의 현장해결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예상되는 고충민원과 지역동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동신문고의 경우 지난해 1천238건이 접수되어 244건이 합의 해결됐으며, 올해는 1천500건 접수, 300건 합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재외국민의 권익구제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 이동신문고 운영경험을 살려 올 상반기 중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재외국민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 중심으로 해외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패방지국 |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국의 경우 올해 총선·대선 등 선거정국과 맞물려 부패문제가 부각되며 대의신인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부패관행 혁파 등 근원적 대책 추진 ▲범국민 의식개선, 청렴문화 확산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국가청렴도 제고 종합대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가칭)'을 제정하고, 청탁 등록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관행 및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상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사후처리 등 통제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개선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검소한 경조문화 기준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도 부패방지국의 올해 계획.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에서부터 고위직 진입까지 전 과정에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교육관(가칭)'을 개관해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 일반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국제 반부패 교육허브 역할까지 수행하는 청렴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심판국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행정심판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한국형 권익구제기관으로서 행정심판의 역할 제고 ▲행정심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및 홍보강화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건처리 단

계별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답변서 제출 법정기한(10일) 경과 이후에는 유선·문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국장이 해당 부처를 방문해 독려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행정심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증거조사와 구술 심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10건이던 현장조사가 올해에는 4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구술심리 허용 확대도 지난해의 62%에서 올해는 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한 곳의 사이트로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청구부터 재결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 10월부터 허브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15년 완성할 계획이다.

권익제도기획관실 | 약자가 웃을 수 있는 제도개선

권익제도기획관실은 ▲부패유발 요인 제거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한발 앞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업체 선정 불합리, 판매수수료 과다 등 특히 공공 유통사업자의 경제주체 간 불공정 요인 개선에 나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을 막고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공공발주 사업의 특혜와 부조리를 차단하고 입찰공고에서부터 공사과정까지 공공공사의 단계별 부패유발 요인 제거에도 나선다.

최근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더욱 지탄을 받고 있는 낙하산 인사, 유력 인사 및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사비리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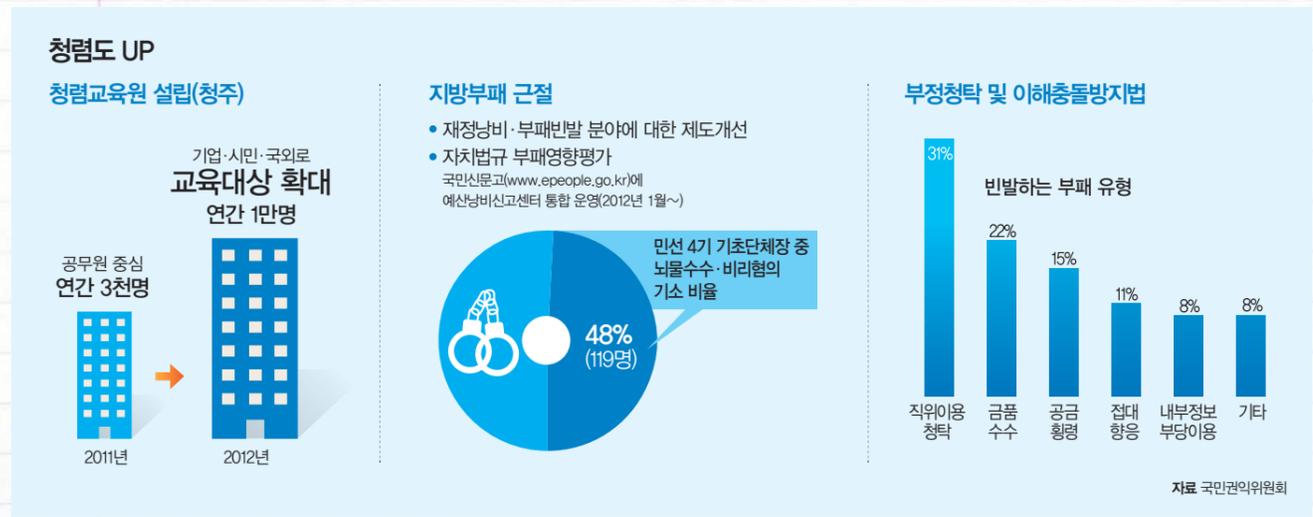
이 밖에 인터넷 쇼핑물 등의 환불·환급 정보 미고지, 신용카드 리빙서비스 등의 동의 없는 계약기간 자동연장, 도시개발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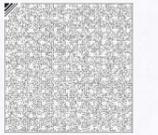


있어 형식적인 주민공람·공고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서며 환불·교환, 배송 중 물품파손·도난에 따른 배상문제 등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더불어 주거·일자리·보육 등 2040세대에게 실질한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며, 요양시설 투명운영, 연금 지급 등 노령세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권익향상에 힘쓰며 화물트럭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권익향상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행복지수' 조사 결과 올해보다는 5년 뒤 80점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 권익위와 같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약자와 낮은 곳을 살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1년 온라인 민원 접수 1백여만 건

행정기관의 '권익위 권고 수용률' 89.4%... 국민대변자로 우뚝

주위가 어둠에 잠겼을 때 희망은 그 빛을 발한다.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길을 알려주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00만 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민원을 바탕으로 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률도 높다. 권익위를 통해 작은 소리가 큰 희망으로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글 박경아 기자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온라인상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2011년 한해 동안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정부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100만 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1월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118만 5,234건의 민원과 제안이 신청됐다.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 이들 민원과 제안 가운데 민원이 107만 698건이었으며, 제안은 11만 5,281건이 접수됐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3만 4,326건으로 민원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29만 1,756건 ▲부산 8만 6,284건 ▲인천 8만 1,234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총 11만 8,62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8만 3,784건), 고용노동부(8만 1,489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은 경기도, 부처는 경찰청 민원이 가장 많아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찬반쟁이 뜨거웠다.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두드러졌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직권해지, 국방부의 동원훈련 전역부대 배치, 국세청의 홈택스 불편 관련 민원도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들이었다.

정부 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6.0%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5.2%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4.5%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분야는 신호위반 신고 민원, 노동분야는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정산 민원,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민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권고 수용률 영국 65%·오스트리아 50% 수준

그렇다면 이 같은 민원이나 제안을 바탕으로 권익위가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했을 때 어떻게 반영됐을까.

권익위가 2008년 2월 출범 이후 2011년 8월 31일까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한 민원은 총 3,548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

용은 총 3,171건(시정권고 2,196건, 의견표명 975건)이 이루어져 평균 수용률은 89.4%를 기록했다.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피신청기관이 30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어서 수용률 통계는 2011년 8월말까지 실적만 집계된 것이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10건 중 9건이 수용됐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 영국 65%, 호주 83%, 오스트리아가 50% 수준이다.

어떤 행정기관이 권익위를 통해 제기된 국민 민원과 제안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일까. 출범 이후 10건 이상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분석한 결과 수용률 우수기관(95.0% 이상)은 모두 18개로 나타났다.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 나성운 과장은 "향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관련정보를 각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권고 수용 우수기관

중앙행정기관(3)	경찰청(99.6%), 국방부(98.9%), 국가보훈처(97.6%)
지방자치단체(10)	광역시 경기도(100%), 경상북도(100%), 경상남도(100%), 대구광역시(100%) 기초 강릉시(100%), 마포구(100%), 기장군(100%), 서대문구(100%), 김해시(100%), 용인시(95.7%)
공직유관단체(5)	경남개발공사(100%), 부산도시공사(100%), 한국농어촌공사(100%), 한국수자원공사(98.0%), 한국철도시설공단(95.5%)



윤은기
중앙교육연구원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폭풍은 분노라는 감정의 폭풍이다. 글로벌앵거(Global Anger)라고 이름 붙여진 이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묘한 것은 분노의 목소리가 크고 분노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제일 돈이 많이 몰려들고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월스트리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분노의 폭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건국 이래가 아니라 단군 이래 가장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도 역시 필요한 일이다.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미 분노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기관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화가 나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화가 풀린다.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화가 풀린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원로가, 국회가, 대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왔지만, 지금 그 신뢰가 많이 깨져 버렸다.

사범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치가 무너지자 더욱 더 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

국민권익위는 국민행복의 종결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이고 좋은 문화이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마음놓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온갖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화난 사람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헝그리(Hungry)시대를 벗어나니까 앵그리(Angry)시대가 나타난 것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분노는 심리적 현상이다. 분노는 주로 무시당할 때, 차별당할 때, 압박당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때, 행복추구권이 억압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은 배고파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아도 화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공분이다.

최근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공분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제도고 좋은 문화다. 그러나 분노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

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주는 곳이어야 한다. 마음놓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문턱이 높은 곳이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갖 채널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힘이 있어야 한다.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기만 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찾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근 실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는 기대를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기대도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의 책임자’ ‘국민행복의 종결자’ ‘분노사회의 종합해결자’.

공 / 감 / 누 /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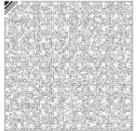
포커스 反부패 경쟁력 뛰어난 기관 정해줍니다

이슈 차상위계층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우리 이렇게 일해요 - 행정심판국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행정심판 맡아

글로벌 권익위 反부패시스템, 개도국에도 지속 확산





국민권익위는 1월 10일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는 정부 기관의 '청렴도'를 정해 주는 기관으로 정착되고 있다.

反부패 경쟁력 뛰어난 기관 정해줍니다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발표... 공정위·통계청·도로공사 등 1등급 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0일 중앙행정기관(39곳)과 광역단체(16곳), 시도교육청(16곳), 공기업(27곳), 기타 공직유관단체(88곳) 등을 대상으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흘린 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평가였다. 글: 김태환 기자

담오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가축을 벗겨 제 이익을 쟁기는 것이다(貪汚非徒得 卽剝民而益己也). <성호사설> '청렴과 탐오' 중에서.

<성호사설> 곳곳에서 이익(李瀾, 1681~1763) 선생은 백성의 궁핍한 삶을 탄식하면서 탐학(貪虐)을 일삼는 관료들을 비판한다. 위기가 고통스럽다. 사대부가 벼슬을 위해 익혔던 사서삼경(四書三經)

은 사대부가 도덕적 존재임을 끊임없이 설파한다. 그럼에도 탐학은 과거나 지금이나 왜 사라지지 않는가.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가 맡았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정위,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이 '매우 우수'(1등급) 등급을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상 기간 2010.11~2011.10)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매우 우수)'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전라북도, 경기도, 대전교육청, 경북교육청, 기술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3년 연속 '2등급(우수)' 이상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조달청,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대전교육청, 경북교육청, 제주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N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3년 연속 '4등급(미흡)' 이하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충청북도, 강원교육청
청렴도는 낮지만 시책평가 점수는 높은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청렴도는 양호하지만 시책평가 점수는 낮은 기관 법제처, 외교통상부, 인천시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모두 미흡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경남교육청,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받았다. '매우 우수'는 평가대상 기관 208곳 중 고작 17개 기관(8.2%)에 불과했다.

“反부패 최고기관들은 내부고발 활성화”

탐학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이 가장 왕성한 17개 기관의 특징은 무엇일까.

청렴조사평가과 양종삼 과장은 “17개 기관은 반부패 전문인력을 충원하거나 TF팀 구성, 청렴자문단 초빙 등 부패를 근절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여기다 내부고발 활성화, 부패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 부패행위 적발 노력과 강력한 처벌이 고루 병행됐다”고 말했다. 탐학, 그러니까 부패와 비위에 눈 감지 않는 조직 시스템과 기관장의 노력, 공무원들의 내부고발이 주효했다는 얘기다.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아무래도 부패에 빠져들 개연성이 많았다고 한다. 청렴조사평가과 김준태 사무관은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실적 보고서 작성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기관장들의 부패척결 의지 역시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정에서 모든 기관이 잘 따라왔을까. 2011년도 평가는 전년과 달리 최종결과 발표에 앞서 기관별 점수를 미리 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두었다고 한다.

“불필요한 실적 홍보 그만”... 보고서 간소화

당연히 이의가 빚발쳤다. 청렴조사평가과 이덕희 사무관은 “평가가 시작된 2002년 이래 처음

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사소한 문의부터 평가기준에 대한 문의까지 내용도 아주 다양했다”며 “제기된 내용에 대해 일일이 검토의견을 쓰다 보니 업무가 폭주해 당초 예정됐던 최종 평가결과 발표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평가방식 개선차원에서 '실적보고서' 제출 서식을 간소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평가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마구' 보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낭비가 발생하니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었다.

결국 권익위는 각급 기관에다 '정해진 서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하겠다'는 방침까지 통보했다. 이덕희 사무관은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 안타깝다”며 “부패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학문으로 치면 기초학문을 튼튼히 닦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부패 없는 행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강조했다.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적잖다. 도입 취지는 훌륭하지만 수혜를 하기 어려워 '그림의 떡'이 된 제도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변형주 기자

사회적 약자 위해
'의료비 대불제도' 정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까지 함께 개선

●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연을 접하기란 어렵지 않다.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이 촘촘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차상위계층이 그렇다. 자력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형편도 안되고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를 국가가 빌려주는 '의료비 대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장벽을 낮춰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979년 도입된 의료비 대불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 복지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가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비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원범위가 한정적이다. 의료비 대불제도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 급여부분만 지원한다. 당사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비급여부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장벽 해소엔 역부족이다.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도 않는다. 1998년에 39건 2억 3,0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엔 7건 788만원 크게 감소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우선 지불해 준다. 진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영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민영병원이 이 제도를 회피하는 이유는 병원에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다.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더욱이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32%(2010년 기준)에 이르러 급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인 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범위를 비급여부분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주취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인권보호와 범칙금 등 제재 실효성 높여

●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는 모른 척 눈감아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취자(취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들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술김의 다툼으로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공권력이 낭비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취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주취자용 경찰장구를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수갑의 경우 일반적인 철제수갑은 주취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갑 안쪽에 실리콘이 붙어 있거나 가죽으로 된 수갑 등 주취자용 장구가 필요하다.

주취자의 인권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취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경찰이 주취자를 대할 때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취자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도 확대한다. 주취자들은 그동안 지구대 등에 대기하는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공무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지방청별로 1곳 이상 주취자 안정실을 시범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범죄예방은 물론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구대 업무 중 21%가 주취자 해결에 소요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57.9%가 취중에 발생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의료비 대불제도'
적용범위
비급여부분까지
확대 권고



해외의 주취자 보호장구 현황

국가	보호장구	근거	비고
일본	수갑(가죽벨트), 포승, 진정의, 방성구(마스크) 등	·경찰유치관리훈령 (시즈오카현) ·주취자보호취급요강 (경시청)	도주, 위해, 시설파괴, 큰소리 또는 난폭, 자해행위 등 방지
중국	밴드, 포승줄	공안기관행정사건 처리절차규정	수갑·족쇄 등 경찰도구는 안됨
영국	보호장구를 구비한 주취자 호송용 밴차량	형사증거법, 인권법, 경찰직무규정	
미국	가죽끈 또는 수갑 등 일반경찰장구	통합일코올중독 및 주취치료법	난동시
독일	수갑, 족쇄구비 침대	통일경찰법	유치장 난동시

주취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상향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음주소란의 경우 현재 벌금은 94년 이후 5만원에 묶여 있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
체납액·재산상태등 고려해 압제속에 철퇴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약할 만한 일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차량이 무려 2,00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금액으로는 1억 1,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 2008~2010년 사이 50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6,532대에 달한다. 수령 초과를 이유로 폐차를 해 수백 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2009년 현재 자치단체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은 57.6%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은 앞으로 보기 힘들 전망이다. 권익위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폐차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한다.

압류등록돼 폐차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압류돼 운행하지 않을 때 보험이 만료되거나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일이 적잖았다. 과태료 부과시점을 폐차장 입고 시점이 아닌 말소등록 완료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압류등록 차량은 폐차 완료 시점(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은 통상 50일)을 기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 현황 (2009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법위반	배출가스 정밀검사미필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미필
부과액	601,877	340,794	177,182	57,964	17,529	8,408
체납액	346,510	148,629	142,449	33,961	14,881	6,590
체납률	57.6%	43.6%	80.4%	58.6%	84.9%	78.4%



퀵서비스 사업 관리체계 마련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 권고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는 일반화한 운송 형태다. 현재 전국에 3,000~4,000개 업체에 약 17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업계 상황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요금체계도 없고 배송시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999건의 민원이 접수됐을 정도다.

종사자들의 신분도 위태롭다.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퇴근 비용, 결근 시 벌금 등 주요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만 장비구입과 유지관리 비용은 종사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보험가입률도 턱없이 낮다. 종사자의 30.8%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고율이 높아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방지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사업자의 신고제 도입 ▲표준배송요금 기준 마련 ▲퀵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친자관계'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
복잡한 행정쟁송 절차 없이 유족등록 바람직

● 1953년생인 안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사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됐다. 법률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1957년에야 출생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부친이 전사한 이후 태어난 셈이 됐다.

안씨처럼 법률적인 친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친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행정쟁송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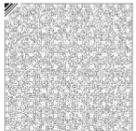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자녀들로서 나이가 많아 쟁송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존수당, 의료지원 등의 수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권익위는 안씨처럼 사실상의 친자도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포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행정쟁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고의 없는 도로점용엔 변상금 대신 점용료
불필요한 원상회복 없게 의무 면제 구체화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반값지 않은 소식을 접했다. A씨의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 9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주택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무단점용이 아닌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점용료는 변상금보다 저렴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도 구체화해 불필요한 도로까지 원상회복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도로점용허가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신속하게 승계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민원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행정심판 맡아

6개 과에서 매년 2만~3만건 접수... 따뜻하고 공정한 현장중심 서비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상담, 접수, 검토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 청구인 상담을 통해 청구인의 사연을 검토하고 적절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글: 권세진 기자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등 6개의 과로 구성돼 있다. 행정심판국은 매년 2만~3만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서모씨의 사례

무공영예수당 772만원 반납 “너무합니다”

최근 권익위가 결정한 서모씨의 사례는 행정심판이 선량한 약자의 편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6·25 당시 무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서모(82세)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2001년 7월부터 무공영예수당을 받아 왔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해 온 순천보훈지청은 2011년 4월 서씨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대상자에 적용된다고 통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받았던 무공영예수당 772만원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청구인의 구술신청도 가능하다.

을 반납하라고 청구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순천보훈지청은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을 재검점하던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는데, 서씨가 이에 해당함을 알게 됐다.

서씨는 1950년 3월 23일 부역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위반, 금고 10월 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법적용대상 배제사유)를 적용, 순천보훈지청은 서씨에게 위와 같이 통보한 것이다.

순천보훈지청은 “서씨가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하게 돼 이미 지급된 무공영예수당을 국가유공자법 제75조에 따라 보존급여금 과오급금으로 결정했다”며 하자가 있는 종전 처분을 바로잡아 취소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보존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관리기관도 일부 잘못, 과오납 환수는 부당”

서씨는 이에 반발했다. “18살 어린 시절 멋모르고 한 부역 때문에 실형을 받았고, 이를 반성하며 6·25에 참전해 목숨 걸고 싸워 무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았다”며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 10년 동안 수당을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씨와 순천보훈지청의 주장은 양쪽 모두 일리가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순천보훈지청에 수당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근거로 청구인의 전과가 무공을 세우기 전의 전과라는 점, 또 유공자예우 적용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지 60년 만에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었다.

소송보다 비용·시간 크게 절감

구체적으로 ① 법 적용대상 제외사유가 된 청구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청구인이 무공훈장 대상이 되는 6·25사변에서의 전과를 세우기 이전의 전과인 점 ②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사유가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형 집행일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야 보존급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점 ③ 청구인이 무공훈장 대상이 되는 전과를 세운 후 벌금을 선고받은 2건의 경미한 범죄사실 외에는 60년 동안 범죄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한 법적용대상 제외결정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재등록하기로 결정한 점 ⑤ 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지급받은 보존급여금 중 환수통지된 772만원(2006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존급여금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고령인 청구인의 현재 나이에 비추어 한꺼번에 반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했을 때의 나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무공영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국 재정경제심판과 박희정 사무관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면 구술신청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 행정심판을 국민들이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



反부패시스템, 개도국에도 지속 확산

G20·OECD와 협력 통해 뇌물방지협약 등 글로벌 스탠더드 주도

2011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反)부패라운드와 옴부즈만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한 한 해였다.

‘G20 반부패 실무그룹(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우리 정부의 반부패 활동을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3단계 현장심사와 OECD뇌물방지작업반 전체회의의 심사 등을 유관부서와 공조해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을 완료해

OECD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처벌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 2011년 말 현재 34개 OECD 회원국 및 4개 비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에 사무국으로 참가해 회원국 간 협력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회의운영규칙(TOR) 등을 마련해 반부패기관장회의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회의 참가와 함께 호주 교민·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재외국민의 고충해소와 권익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해당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옴부즈만 활동으로 재외국민 권익보호도 강화

지난해 4월엔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고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 후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스템 등 심층·전문연수를 운영했다.

또 활발한 옴부즈만 활동을 통한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간 특성을 고려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옴부즈만기관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등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IOI는 권익보호 개념의 확산을 위해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세계 76개국, 135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가입한 협의체다.

키르기스스탄(2011년 10월), 태국(2011년 12월)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협력을 확대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재외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글·김정우 기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태국 옴부즈만 이해각서 체결식(2011년 12월 5일)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이 1월 18일 열린 반부패추진자담 전담회의에서 반부패 추진자담을 설명하고 있다.

소 / 통 / 누 / 리

국민권익위가 갑니다 두드리세요! 민원이 해결됩니다
원주 조정회의 현장 주민 애로사항 씻어준 '솔로몬의 선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성 청간해변, 경관용 울타리로 바꾼다
따뜻한 국민권익위 나눔퍼는 '권익사랑 봉사단'이 뜬다
블로그 기자단 "국민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1월 11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

두드리세요! 민원이 해결됩니다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이동신문고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행정제도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즉석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실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아가 봤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집 앞 도로의 신호등 설치 문제로 작년부터 시청을 들락거렸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게야. 그런데 얼마 전 TV에서 이동신문고가 충주에서 열린다는 광고를 봤어. 그래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와 봤지.”

올해 첫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열린 충주시청 다목적홀에서 만난 김용(65·충주시 문화동)씨. 김씨는 이동신문고가 1월 11일 충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충주시청으로 왔다고 한다.

그는 “우리 동네 주민들 생각으론 꼭 필요한 신호등인데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현장답사 한 번 없이 ‘안되는 일’이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다”라며 “여기 오면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 준다 하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볼 첫 이동신문고... 민원 해결장 확인

이날 다목적홀에는 김씨와 같은 많은 시민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아 속을 태운 민원을 털어놓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모여들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법률상담가들이 민원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는다.

충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이동신문고는 법률상담과 행정문화, 제도개선, 도로교통, 농림·환경·산업, 주택건축 등 10여개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상담을 벌였다.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들은 모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행정 전문가들이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들이 담당한다. 이처럼 행정의 베테랑들이 모여 상담에 응하는 만큼 해결책에 대한 정확도는 99.99%의 높은 순도를 자랑한다.

물론 민원인의 마음에 꼭 드는 상담결과만 나오진 않는다.

중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김모(76)씨는 “여기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예전에 변호사한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 및 일정

월별	권역	지방자치단체
2012년 1월	충북	충주(11일), 음성(12일), 진천(13일)
2월	강원 (내륙권)	홍천(22일), 양구(23일), 화천(24일)
3월	경기	광주(20일), 수원(21일), 군포(22일), 시흥(23일)
4월	경남	양산(25일), 밀양(26일), 창녕(27일)
5월	광주·전남	영암(23일), 광주 남구(24일), 곡성(25일)
6월	대구·경북	포항(19일), 경주(20일), 영천(21일), 대구 남구(22일)
7월	충북·전북	청원(17일), 옥천(18일), 영동(19일), 무주(20일)
9월	강원 (동해권)	강릉(12일), 동해(13일), 삼척(14일)
10월	전북	고창(17일), 정읍(18일), 부안(19일)
11월	충남	공주(14일), 천안(15일), 아산(16일)
12월	부산·경남	부산 북구(5일), 김해(6일), 창원(7일)
2013년 1월	충남	보령, 서산, 태안(날짜 미정)
합계		36개 지자체

테 들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만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씨처럼 행정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당연한 일이지만 이곳에서도 손 쓸 방도가 없다.

지난해 1,238건 민원 상담 처리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에서 만난 권익위의 이경복(43) 조사관은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인 만큼 법률적인 부분은 안내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이날의 이동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0건. 교통·도로·산업·농림 분야의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14건은 현장에서 즉각 합의·해결할 수 있었고, 6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예정이다.

이연홍 국민고충처리국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선 민원인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동신문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중 약 20%에 가까운



1월 11일 충주 시청에서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법률상담가들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권익위의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신문고는 2003년 처음 시작됐다. 클릭 한 번이면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간편함’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굳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1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말을 맞대고 고충 파악... 현장 서비스행정의 기본

이연홍 국민고충처리국장은 “교통·통신수단이 미흡한 산간벽지나 컴퓨터 사용법을 잘 모르는 고령자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해결책을 조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해결에 걸리는 시간보다 빠르고, 민원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국민

의 어려움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이동신문고의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관련단체까지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매달 해당 지역의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소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참여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의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충주시청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직접 민원인들의 말에 귀 기울인 뒤 시정상황실에서 이종배 충주시장을 비롯해 충주시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충주시의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김영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하성대 충주시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회장은 “충주는 시내에도 논밭이 있는데, 논밭에 대한 개발규제 때문에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양환 대한상이군경회 충주시지회 회장은 “충주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충주호에 수상비행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민 간담회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복지에 관한 제안도 줄을 이었다. 이선복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장은 “현재 충주시에는 3만 1,000명 가량의 고령자가 거주하고, 이들을 위한 경로당이 520개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는 1개에 불과해 경로당의 관리에 애로가 많다. 양질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민병국 충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농촌 지역

은 한·미 FTA로 인한 시장개방, 농자재가격 확대에 의한 생산비증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저하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농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24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금리를 내리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미 FTA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중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정책이 없다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건의와 제안들을 다 들은 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들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 계속 확대

권익위는 앞으로 이동신문고와 병행해 열리는 지역사회단체장 간담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은 기존 간담회 형태를 유지하되 참여 대상은 각계각층 주민이 고루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며, 도시지역은 의견수렴의 폭이 넓고 대화와 소통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살려 지역의 관심도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테마형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의 경우 올해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한다. 충주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와 같은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별 3개 지역씩 모두 36개 지역에서 운영하게 된다. 반면 도시의 주거 취약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공공사업 갈등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14개 지역(2011년 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하다. 충주시 이동신문고에 온 제가복지센터의 보호사 강연숙씨는 이날 간담회 참석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님과 이종배 시장님께서 진지하게 제 의견을 들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기뻐요. 제가 제안한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에 벽이 없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뿌듯해요.”



“여기가 바로 건등리 침수피해 지역입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1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과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명을 듣고 있다.

주민 애로사항 씻어준 ‘솔로몬의 선택’

올 첫 현장조정회의... ‘원주 건등리 국도변 침수피해 민원’ 16년 만에 해결

오랫동안 고통받고 시달리면서도 풀지 못한 국민들의 민원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해결 방안 중 하나가 현장조정이다. 2012년 첫 현장조정 회의는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어 문막읍 건등리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매년 여름이면 늘어나는 유량을 처리하지 못해 물이 넘쳐 온 42번 국도변 수로. 이번 현장조정으로 이수로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장조정 회의 중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는 권익위 담당자들.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선언이 이어졌다.

“이것으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11번지 등 일원의 남측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권익위가 개최한 2012년 첫 현장조정 회의가 열린 1월 11일 문막읍사무소 2층 회의실. 2자형 탁자 중앙에 앉은 김 위원장의 조정 성립 선언과 함께 탁자 좌우에 앉아 있던 조정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관련기관 대표)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건등리 1411번지 등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온 지 16년 만에 마침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성립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주민들은 관계기관이 조정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청구권을 갖는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건등리 주민 정명교(53)씨를 대표로 하는 주민 5명이 ‘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백중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

본부장, 이용호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이덕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시장 등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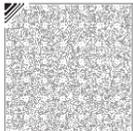
| 문막읍 도시화로 인한 상습 침수

이날 현장조정에서 해결책이 마련된 건등리 상습 침수피해 지역은 조정회의가 열린 문막읍사무소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단지들과 42번 국도 사이의 저지대 농경지 8필지 1만 6,500㎡다.

이곳 농경지는 지난 1995년 42번 국도가 개설된 이래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지어지면서 42번 국도와 아파트 일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넘쳐 침수피해를 겪어 왔다.

실제로 현장조정 회의가 열리는 날 둘러본 문막읍사무소 주변은 새로 들어선 널찍한 포장도로와 신축 건물들, 속속 들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42번 국도를 포함한 포장도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부 역시 화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어 물이 스며들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건등리 일대



에 비가 오면 빗물이 저류할 곳이 없어 낮은 지역으로 흘러내렸고, 기존의 수로가 확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42번 국도와 아파트 단지들 사이의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어 온 것이다.

원주시의회의 광희운 의원(민주당)은 “건등리 상습침수는 문막읍의 도시화와 더불어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는 강원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도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침수지역에 농경지를 가진 주민들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원주시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시지 등 관계기관들의 합의 부족으로 몇 년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해결이 되지 못해 왔다.

그동안 원주시는 건등리 침수피해에 대해 “최근 집중호우로 유량은 증가하는데 42번 국도 남측 수로의 용량이 부족해 생긴 것이기에 이 수로를 교체하도록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근 택지개발부지의 저류 기능이 약화되어 농업용으로 설치된 42번 국도 남측 수로에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이 집중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해당 유역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관장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해 해결할 사안”이란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 42번 국도 관리를 담당하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국도 개설 당시 농경지 침수 피해는 없었으며, 42번 국도 남측 수로 확장을 위해서는 원주시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하므로 원주시가 수로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 지역 주민 8명 명의로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이번 현장조정으로 빗물 유입의 일부 차단과 수로 확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이번 현장조정 핵심은 3개 관련기관이 분담해 건등리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원주시의 경우 문막사거리 동쪽의 동경뜰 지역과 신구 휴엔하임아파트에서 나온 빗물은 이들 아파트 건

축허가 시 협의되어 있던 우수처리사업 시행과 연계해 기존수로와 42번 국도 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해 건등천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공사를 맡았다.

역할 분담으로 근본 해결책 마련

또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문막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건등리 421의 10번지까지 42번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를 맡고,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 수로관 일부의 확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 중재안을 마련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치수 및 방재대책 없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침수피해를 겪던 주민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맙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원주시, 국도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장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김영란 위원장 등이 건등리 침수피해 방지대책 현장조정 합의된 뒤 기쁜 마음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현장조정 회의에서도 대표로 조정 합의서에 서명한 정명교씨는 합의서 서명을 마친 뒤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늘 조정회의에서 나온 예방책들이 앞으로 잘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현장조정 회의가 끝난 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데에도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20여년간 농사를 짓다 얼마 전 검정고시를 보고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는 정씨는 “공부를 한 힘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신뢰 지속 위해 이행여부 점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이런 일에 앞장서기가 쉽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내 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겪는 일이더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리고는 마을 일기에 마을 어르신들께도 알려야 했죠. 어르신들께 알릴 때는 밥술 가득 밥을 지어 들고 마을회관에 찾아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이날 현장조정 회의석상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조

정인가. 관계기관들이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줄 것이냐”라며 계속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정회의의 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약한 때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김영란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도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어느 기관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는지 일이 설명하도록 권익위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기관의 참석자들에게도 대책 이행의 의지를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도록 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권익위는 차후 원주 현장조정과 같은 현장조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4년간 모두 104회의 현장 조정을 실시해 왔다. 2011년의 경우 전남 강진군의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7월), 경기도 가평 헬기 예비작전 기지 폐쇄(7월) 등 총 24차례의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2012년에는 월 평균 2, 3 차례 현장조정을 실시해 모두 30차례의 현장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건등리 주민들이 웃음을 되찾았다. 2012년에는 더 많은 현장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12월 13일 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민원현장인 강원도 고성군 청간 해변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성 청간해변, 경관용 울타리로 바꾼다

지자체가 관리위임 받아 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엔 변상금 철회 권고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흉물스런 철책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고충민원 신청에 의해 지난해 강릉 사천해변에 이어 올해는 고성군 청간해변의 철책이 철거될 예정이다. 개발과정에서 '잃어버린 땅'이 되었던 양주시 덕정역 인근의 땅도 소유주들에게 되돌아갔다.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명목으로 걷어들이던 변상금 부과도 면제될 전망이다.

글·손수원 기자

군(軍) 경계용 철책 올해 철거

강원도 고성군은 군 경계용 철책이 많은 곳 중 하나다. 이런 철책들은 상시 혹은 야간에는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조차 출입이 금지된다.

토성면 청간해변 또한 1971년부터 철책이 설치되어 통행제한과 경관훼손 등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역주민 430여 명은 지난해 9월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낸 바 있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유명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와 청정한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그동안 192m에 이르는 해수욕장에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조차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 이유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보병사단장, 황종국 고성군수,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정 회의에서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를 철거하고, 대신 경관형 울타리(펜스)를 설치하며 ▲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군 철책이 철거되고 경관형 울타리가 생기면 보다 편리하게 바닷가 출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가시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 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덕정역 주변 완충녹지 잔여지 13년 만에 보상중재

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 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철도화물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고 ▲회천택지개발지구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다.

지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 중 4



일러스트·박상훈

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지만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 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상금 최고 5년... 소급방식도 개선

“S라는 지자체가 있다. 이 지자체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을 만들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까지는 이러한 행위는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내야 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에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은 235만 8,300만원이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지난 2005년 12월 이후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아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이유로 부과되었던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용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과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권한 위임의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처리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결례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권익위는 향후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변상금 부과 시점부터 최고 5년을 소급해 변상금을 산정·통보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토록 했다.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가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을 적용받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당해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던 것 역시 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에는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해결

부산광역시 소재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차도 공사 구간에 매설된 고압송전관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진 민간업체와 부산광역시 간 갈등이 해결되면서 공사가 원만히 재개되게 됐다.

지난 1월 1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유니온스틸 대표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문제가 된 고압송전관로 이설공사를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이 고압송전관로 이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자체나 전기공사는 유니온스틸이 맡고, 토목공사는 부산광역시가 맡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구간은 북항대교 민간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내부순환도로로 건설 중인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의 고가·지하차도 2구간으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유니온스틸 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 온 고압송전관로를 옮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이번 권익위의 중재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당초 계획된 2014년 4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사가 완공되면 부산 신항에서 광안대교를 오가는 항만물동량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고질적으로 정체되던 신선대부두에서 동명오거리 간 교통난도 완화되어 360만 부산시민의 출·퇴근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부산시의 교통난과 부산 신항의 항만물동량 처리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눔 펴는 '권익사랑 봉사단'이 뜨다

김 위원장은 1월에만 세 차례 봉사 나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서비스 등을 통해 현장 행정을 활발히 펼쳐 오고 있다. 봉사과 나눔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현장 행정과 친 서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달리는 그들의 이름은 '권익사랑 봉사단'이다.

글·박근희 기자



1월 17일 설을 앞두고 김영란 위원장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박덕희 노인에게 미술재료를 선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독거세대와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했다. 평소 혼자 있을 때면 그림을 그리며 외로움을 달래는 박덕희(80·서대문구 천연동) 노인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몇 권의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짙만큼이나 절실했다. 자녀의 형편도 넉넉지 않아 박 노인의 월세를 근근이 대고 있는 형편이라 박 노인은 그랬던 그림에 덧칠하는 것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1월 17일 설을 앞두고 박 노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김영란 위원장은 박 노인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천연동 지하 단칸방을 찾아가 박 노인에게 위문금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재료 등을 선물했다. 이에 박 노인은 "이번 설에는 그림을 그리며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남편 가출 후 어려운 환경에서 초·중·고에 다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도 들러 자녀양육에 필요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회 곳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친서민 맞춤형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이라 의미가 깊다. 김영란 위원장과 박재영 부위원장 등이 앞장서 올 1월에만 3차례 발 빠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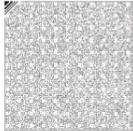
'권익사랑 봉사단' 통해 '과1결연' 사업 정착

3월 중엔 찾아가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권익사랑 봉사단'도 발족한다. 권익사랑 봉사단은 새로운 구성체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봉사활동 단일 브랜드인 셈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과 봉사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도 꾀한다. 권익사랑 봉사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권익위 운영지원과 박문수 서기관은 "권익사랑 봉사단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이를 통해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정선 남면 개미마을 등 3개 마을과 '사1촌' 결연을 맺은 권익위는 권익사랑 봉사단을 통해 농촌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올해 '과1결연' 사업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모든 봉사와 나눔 활동의 재원 마련은 주차 공익성금 및 직원 개별 후원금으로 십시일반 충당할 계획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친서민 맞춤형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과1결연"으로만 연중 41회 방문봉사를 실시했고, 1,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게 박 서기관의 설명이다. 권익위에서는 '1



연말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에는 많은 임직원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시기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1촌' '과1결연' 뿐 아니라 시기별 맞춤형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지난해에는 2월 김 위원장의 영천시장 방문, 아현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를 시작으로 권익위는 시기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바 '찾아가는 현장 행정, 친서민 봉사와 나눔 실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앞장섰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직원들은 함께 봄·가을 결연을 맺은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추밭 정리, 옥수수 수확에 힘을 보탬다. 8월, 이례적인 집중호우를 기록한 경기 북부·남부 등 호우 피해지역 현장에선 복구활동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시기별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봉사'

이외에도 관내 독거노인 위문, 사랑의 김치나누기나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이 거의 매달 이어졌다.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안 국민들의 민원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게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얘기다.

올해 권익위는 권익사랑 봉사단을 통해 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 서기관은 "국민들의 권익과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는 업무 자체가 '국민을 위한 봉사'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권익위는 앞으로 권익사랑 봉사단을 통해 친서민 맞춤형 봉사와 나눔의 모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7기 블로그 기자단 출범...
대학생·주부 등 20명 6개월간 활동



국민권익위원회의 7기 블로그 기자단이 출범했다. 1월 17일 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의 지킴이 역할과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블로그기자단은 권익위의 활동을 현장 취재하고 관련자 인터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권익위의 주요 업무와 청렴 관련 소식을 블로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익위는 2009년 6월부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 왔다.

기자단은 모두 20명이다. 일반 기자는 15명이고, 나머지 5명은 만화 형식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웹툰 기자다.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 분포를 고려한다. 기자단은 앞으로 온라인회의에 참석해 취재 안전과 블로그 홍보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각자 한 달에 3건 이내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면, 선별해 국민권의 블로그에 게시한다.

취재 분야는 다양하다. 국민권익과 관련한 사례들부터 권익위의 활동 중 하나인 ‘이동신문고’ 현지중계, 생활상식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들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글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익위 블로그 및 자신의 블로그에서 권익위를 홍보하게 된다.

블로그 기자단은 기존의 다음 블로그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에서 권익위를 홍보하는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발된 기자단의 명단이다.

취재기자 김서용 이우영 이영호 박세훈 조현주 최유정 장성길 김재영 최형화 김강부 김정아 정세영 양준희 최영훈 권혜모리

웹툰기자 강대영 양은순 양정원 이동규 신수나

글·하주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cafe.daum.net/loveacrc/>



행 / 복 / 누 / 리

여행 경북 영주

시네마 토크 <페이스 메이커>

건강 다이어리 90세 시대 즐길 헬스테크 하세요

역사 속 권익 살아있는 권력 한명회를 낙마시킨 '대간의 탄핵'

컬처 & 컬처 대한민국이 '깔깔깔'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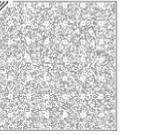
알아두세요 국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확 낮춘다

이 한권의 책 <말과 권력>

뉴스 & 피플

독자와의 대화





경북 영주 부석사 노을에 빠지다



경북 영주는 이곳저곳
참 돌아볼 곳이 많은 곳이다.
부석사를 비롯해 선비촌, 소수서원 등
우리 전통문화를 폭넓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지가 많다.
죽령옛길을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영주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꼽으라면 단연 부석사다. 부석사는 해동 화엄종의 종찰이다. 1,500여년 전 의상이 화엄사상의 깃발을 걸고 중창했다. 절도 절이지만 매표소에서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까지 가는 길이 좋다.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노란 터널을 이룬다. 문을 열면 속이 확 드러나는 요즘의 사찰들과는 판판이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부석사 입구 은행나무 숲길을 '조선땅 최고의 명상로'라고 했다. 가을뿐 아니라 스산한 겨울도 나름 운치 있으니 꼭 걸어 보자.

노을에 비친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숲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단아한 동·서 삼층석탑이 방문객을 맞는다. 그리고 안양루에 서면 겹겹이 물결치는 소백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석사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울 때는 저물 무렵이다. 해질녘이면 소백산맥을 넘어온 장엄한 노을이 절집 안마당에 내려앉고 무량수



소수서원 앞 죽계천에 자리한 울창한 소나무 숲.

주재자이기 때문이다. 불상의 시선은 3층석탑(보물 249호)과 일치한다.

부석사 가기 전 만날 수 있는 소수서원도 빼놓을 수 없는 답사유적지. 소수서원에 들어서면 굽이 도는 죽계천의 수려한 경관 속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먼저 반긴다. 적송군락으로 이루어진 뾰뾰한 소나무 숲은 기품 있는 소나무처럼 강직한 선비가 되라는 뜻으로 학자수라 불린다. 강학당(보물 제1402호)을 비롯해 교수들이 기거하던 직방재와 일신재, 선비들이 기거하던 학구재와 지락재 등의 교육공간과 문성공묘(보물 제1403호)의 제사공간으로 나뉜다. 스승의 그림자도 피한다 하여 학구재와 지락재를 스승의 숙소인 직방재, 일신재의 두 칸 뒤로 물려 지은 점이 이채롭다. 또한 선비의 숙소도 선생의 숙소보다 한 단계 낮게 지었다.

소수서원 옆에 자리한 선비촌은 영주 일대 고택을 재현한 곳이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안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 고택, 김상진 가옥 등 기와집 7채와 장휘덕, 김뢰진, 김규진, 두암고택 가람집 등 초가집 5채가 원형대로 재현되어 있다. 각 고택에는 고택의 특성에 맞는 살림살이와 가재도구가 들여져 있고 토속 음식점, 특산품점 등이 운영되는 저잣거리까지 갖추고 있다. 예약하면 숙박도 가능하며 짬뽕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과거 보러 가던 옛길... 운치 있는 죽령 트레킹

트레킹을 좋아한다면 죽령옛길 트레킹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 죽령은 소백산 도솔봉과 제2연화봉 사이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경새재, 추풍령과 함께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3대 관문의 하나였고 삼국시대에는 고속도로 겸 군사도로였다.

삼국시대를 지나면서 죽령은 영남과 한양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 됐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길에 오르는 선



겨울 영주 여행의 또다른 재미는 죽령옛길 트레킹이다.

비나 영남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의 행차가 줄을 이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애용했지만 일제 때 철도가 개설되고 국도 5호선이 뚫리면서 옛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1년에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 후 경북 쪽의 죽령옛길이 복원되면서 회방사역에서 죽령 정상에 이르는 2.5km 산길에 다시 길손이 붐비기 시작했다.

회방사역에서 시작하는 트레킹 코스는 가파르지 않아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다. 흰칠한 낙엽송들로 가득찬 숲은 상쾌함과 청명함을 더해 준다. 이 길에는 옛이야기가 많이 얹혀 있다. 퇴계 형제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고도 하고 향가 모죽지랑가의 주인공 죽지랑에 대한 얘기도 전한다. 오대산 상원사 동종에 얽힌 얘기도 재미있다. 문수동자를 만나 피부병이 나은 세조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종을 찾아 상원사로 옮기라고 했다. 그래서 찾은 동종이 안동 남부의 동종이다. 하지만 이 종을 옮기던 중



우리 옛 전통 생활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선비촌.

죽령고개를 앞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책임자가 마을 노인에게 물었더니 “이 동종이 800년을 죽령 남쪽에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넘으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런다”고 답했다. 그리고 노인이 시키는 대로 종의 한 부분을 떼어내고 나자 동종이 움직였다고 한다.

주막거리를 지나면 길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이내 죽령주막이 나온다. 막걸리와 파전, 나물전 등을 부쳐 낸다. 이곳에서 고개 정상은 두어 걸음이면 족하다.

풍기온천에서 푸는 여행의 피로

덕고개라 부르는 덕현리 골짜기에 자리한 성혈사는 그다지 알려진 곳이 아니다. 차로 절 마당까지 오를 수 있어 꼭 한번 들러볼 만하다. 나한전이 볼거리다. 나한전 정면 세 칸의 문짝들에 아로새겨진 문살이 예쁘다. 연꽃무늬를 새긴 문살로 양쪽 문을 장식했는데 구름, 학, 물고기, 게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동자승도 찾을 수 있다. 아침과 저녁 무렵에 문살 무늬에 어롱대는 햇살이 눈부시다. 거북의 등에 한 쌍의 용이 뒤엉켜 올라가는 모습을 새긴 석등도 아름답다.

풍기는 우리나라 3대 인삼 재배지이기도 한데 풍기인삼시장에서는 100% 국내산 인삼과 홍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풍기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50여 개의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 있다. 인삼 시장 주변 상가에서도 그해 수확한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여행의 피로는 풍기온천에서 풀자. 소백산 산행객들 사이에 물 좋은 온천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지하 800m에서 끌어올린 유황온천수인데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만성관절염, 신경통, 동맥경화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의 고장답게 풍기 인삼을 활용한 인삼사우나탕도 운영하고 있다. 씹살한 인삼향이 그윽한 사우나탕에 5분쯤 앉아 있으면 온몸에 인삼향이 배면서 심신의 피로가 말끔하게 가시는 기분이다. 고온탕, 온탕, 저온탕, 냉탕, 건식 황토사우나, 습식사우나 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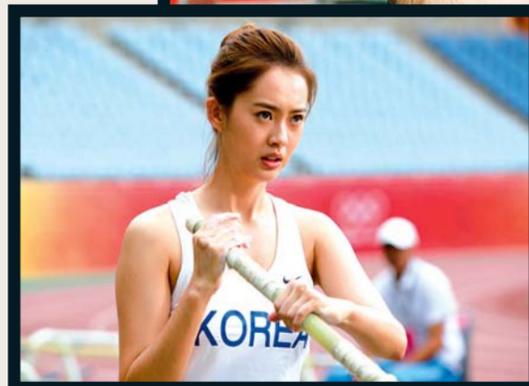
〈페이스 메이커〉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영화 〈페이스 메이커〉에는 평범한 소시민의 성장기가 담겨 있다. 주인공 '주만호'는 좌절과 아픔을 딛고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인물로, 소시민의 삶을 대변한다. 글·박소영 기자

영화 〈페이스 메이커〉는 평생을 다른 선수를 위해 마라톤을 해온 '페이스 메이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페이스 메이커는 마라톤이나 수영 등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말한다. 주인공 주만호(김명민 분)는 30km까지는 어느 누구보다 잘 달리지만 그 이상은 달릴 수 없는 페이스 메이커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라톤 완주라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달릴 날을 꿈꾼다.

김명민 특유의 메소드 연기 사실감 더해

영화 〈페이스 메이커〉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배우 김명민'의 등장일 것이다. 그의 명품 메소드 연기를 빼놓고는 〈페이스 메이커〉를 말할 수 없다. 김명민은 절박한 심정의 마라토너를 완벽하게 표현



영화 〈페이스 메이커〉는 평범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기 위해 인공치아를 끼우는 수고를 감수했다. “주만호의 애끓는 마음과 절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죠. 예전에 우연히 봤던 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코로, 입으로 숨을 가쁘게 내뿜으면서 뛰어야만 했던 병든 말의 얼굴이요.”

그는 “말의 얼굴에서 가장 애처로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입이었다”며 “그래서 인공치아를 끼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사람의 '성공', 감동적으로 그려

40℃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소화한 것은 물론이다. 김명민은 영화 〈스틴트맨〉을 촬영하던 지난 2004년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당해 장시간 걸거나 달러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주만호를 연기하기 위해 무려 두 달 간 실제 마라톤 선수들과 함께 일주일에 3~4회씩 훈련을 받았다.

〈페이스 메이커〉가 관객들의 호평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이 영화에는 ‘평범한 사람의 도전과 성공’이라는 정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라토너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1등을 위해 달려야 했던 사람, 평생 다른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완주에 도전하는 것보다 감동적인 스

토리가 어디 있을까. 영화 〈페이스 메이커〉는 그런 주만호의 도전과 성장을 짜릿하게, 때로는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다. 김명민은 “〈페이스 메이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라고 강조한다.

〈페이스 메이커〉의 김달중 감독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페이스 메이커”라고 말한다. 선택받은 소수나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만호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 감독은 영화에서 소외된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린 이유에 대해 “소외된 사람들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그만큼 더 아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연출가의 몫”이라고 말한다.

김 감독이 영화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의 승리였을 것이다. 주인공 주만호가 42.195km 꿈의 완주에 성공하는 모습은 평범한 소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만호는 30km만 달린다는 이유로 ‘삼발이’라 불리며 조롱당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린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 간다고 했던가. 여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이들도 있다. 1987년 동아마라톤대회의 페이스 메이커였던 이창우는 완주해 9위를 기록했고, 1997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의 페이스 메이커였던 케냐의 벤슨 마사는 하프마라톤 세계신기록 보유자였다. 1999년 로마마라톤대회의 페이스 메이커인 케냐의 타누이는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들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 정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이들을 ‘삼발이’ 페이스 메이커쯤으로 치부했지만, 이들에게 마라톤 우승은 ‘남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권리였다. 우리는 세 선수와 주만호의 삶에서 희망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

90세 시대 즐길 헬스테크 하세요

중년을 넘어 장년으로 넘어가면 다들 건강을 위해 많은 결심을 한다.
그동안 젊다는 생각에 몸을 혹사한 것에 대한 반성일까.
담배를 끊기도 하고, 절주를 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고 결심하는 이가 많아진다.
평균수명 90세를 앞둔 시대에는 전략적인 내 몸 사용 관리법이 필요한 것이다.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단발성 건강 결심도 좋지만, 이제는 건강관리를 좀 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오래된 건물도 낡으면 리모델링을 하듯 우리 몸도 그쯤 되면 리셋이 필요한 시기다.

사람들은 재산과 자산 관리는 매우 계획적이고 분석적으로 한다. 단기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년 후 노후생활까지 대비해 자산운용 방침을 세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채테크'라는 용어다.

건강관리에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헬스테크(Health Tech)' 말이다. 노후를 위해 채테크를 한다면 개인연금 성격의 보험이나 적금에 들 것이다. 그런데 이 돈으로 헬스테크를 한다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데 쓰고 꾸준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1인당 평생 의료비 평균 6,300여만원

채테크의 경우, 나중에 한 달에 몇 십만 원의 돈을 받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헬스테크를 한다면 노령까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활발한 생산력과 노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박사팀이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하여 우리 국민의 의료비를

산출한 결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6,313만원이 들 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나이가 들 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0~74세 의료비는 20~24세 의료비의 6.8배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60~80세 사이에 평생 의료비 지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3,154만원을 지출한다. 샐러리맨들의 평균 퇴직 나이가 5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고정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약 13만원의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지출된다는 계산이다.

만약 현재 50세인 사람이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권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매달 10만원을 10년간 적립(운용수익률 5% 가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중도해약을 하지 않으면 60세부터 10년간 매달 16만 4,000여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퇴직 후 받게 되는 개인연금액을 의료비 지출과 상계하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게 된다는 계산이다.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매달 10만원을 건강에 투자하여 체력을 다지는 데 쓰고, 질병을 조기 검진하는 데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아마도 10년 후 건강한 신체와 왕성한 노동력을 가질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헬스테크'를 하면 노령까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노동력도 가질 기회가 많아진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져 그에 상응한 의료비 지출도 확연히 줄 것이다. 일석이조 효과다. 나이가 들면 쉽게 찾아오는 당뇨·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과 그것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출 등을 감안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자명해진다.

심폐 기능·근력 강화 골고루 '투자'

헬스테크는 거주 환경에도 적용된다. 통상 살 집을 고를 때는 집값이 오를 전망이나 생활의 편의성 등을 주로 고려한다. 하지만 고령 사회에서는 건강을 위한 주거 환경이 더욱 소중해진다. 장년에 이르러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각종 공해 등 건강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집 주변에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시설 등이 잘 갖춰 있는지, 의료기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람은 노후에 자기가 오랜 기간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해야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노인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분산투자도 필요하다. 중·장년층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등산·달리기 등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폐기능을 위한 운동과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골고루 나눠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산으로만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 근육의 힘을 키우고 지구력을 늘리는 데는 좋다.

하지만 등산은 달리기처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별 소득이 없다. 건강한 신체라 함은 원활한 심폐기능과 근골격의 탄실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고루 발달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투자 개념이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적절한 자산관리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건강도 타고난 체질에 다소 좌우되지만,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나이 들어 머리술이 빠지는 정도는 유전적 요인이지만, 젊어서의 혈압과 체중을 평생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살아있는 권력 한명회를 낙마시킨 '대간의 탄핵'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중요한 주제였던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견제와 조화는 실제로 500년 조선의 정말 뿌리 깊은 화두였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생각하에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절대권력을 견제할 많은 장치들을 2중 3중으로 마련해 놓았다. 우리 옛 조상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 글·김정미(사나리오 작가)



일러스트·신용호

조선시대에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 관리들의 부정과 시정의 풍속을 단속하는 사헌부와 임금의 흠여 잘못할 때 이를 비판하고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사간원이다. 이들 부서의 관료들은 사헌부의 대관과 사간원의 간관이라는 명칭을 줄여 대간이라고 불렀다. 대간들은 임금부터 말단까지 지위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조선의 정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고발하고 탄핵했다.

대간은 주로 젊고 우수하며 강직하고 청렴한 인재들로 발탁했는데 그런 만큼 젊은 나이에 대간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검증된,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들이었다. 그러기에 대간이 된다는 것은 큰 영예였고 아울러 훗날 정부의 주요한 관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대간의 자리란 것이 때로는 고위관료, 심지어는 왕과도 대립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

에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간 제도 자체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한 통치라는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체계를 떠받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간은 5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수많은 탄핵을 통해 절대권력은 견제되었다.

강직하고 청렴한 젊은 인재들이 많아

조선 초 중기 대표적인 권력가이던 한명회도 이런 대간들의 탄핵을 통해 그 권세를 견제받았고 결국 실각한 인물이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을 실제적으로 기획한 한명회는 세조와 예종을 거쳐 성종 때까지도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계유정난으로 공신이 된 한명회는 이후 예종과 성종의 장인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성종 초년에는 왕인 성종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성종이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과 형 월산대군

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장인 한명회 덕이라고 할 정도였다.

왕도 눈치를 봐야 하는 무소불위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한명회를 견제하고 탄핵한 것은 대간들이었다. 성종 치세 동안 한명회는 대간들에게 107회나 탄핵을 받았다. 이 탄핵들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탄핵들이 거듭될수록 한명회의 권세는 풀이 점점 꺾여 들어갔고 마침내 성종 12년(1481년) 압구정 사건으로 실각하게 된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다.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던 한명회는 1476년(성종 7년) 한강에 압구정(狎鷗亭)이란 정자를 지었다(이것이 오늘날 압구정동의 유래이다). 압구정이라는 정자 이름은 한명회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예겸에게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다. 압구정은 '속된 세상 일에서 벗어나 한적한

강가에 머물며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정자가 완성되던 날 성종은 특별히 이를 축하하는 시를 지어 내리기까지 했는데, 이 압구정은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당시 한명회의 기세등등한 권세를 상징하는 정자였다. 한명회는 압구정을 정자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자신의 호로도 삼았다. 그만큼 압구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다.

천막 사용 놓고 왕과 대립... 파직시켜

막강한 권세가였던 한명회가 고르고 고른 장소인 만큼 압구정은 풍광이 좋았고 중국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압구정은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한번쯤 들르는 코스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한명회는 명나라 권력자들과도 친분을 쌓아서 외교적인 면에서도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한명회는 명나라의 인맥을 통해 외교문제를 왕과 조선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등 성종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1481년(성종 12년) 평소 한명회가 친분을 쌓았던 명나라의 환관 정동이 사신으로 나오면서 일이 벌어졌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정동을 상대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한명회는 압구정이 사신들을 대접하기에 좁다는 이유를 대며 성종에게 왕이 사용하는 차일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한명회의 무례한 부탁을 성종은 거절했다. 그리고 압구정이 좁다면 다른 곳에서 잔치를 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한명회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궁궐에서 쓰는 보첩만(차마에 잇대는 장막)을 청하였다. 성종은 다시 제천정에서 잔치를 치르도록 하고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한명회는 갑자기 제천정 잔치에는 자기 아내가 아파 나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왕과 맞섰다. 왕으로서는 기가 막힌 상

황이었지만 권세가 한명회를 누를 힘이 아직 부족했던 성종은 제천정 외에 다른 한강변 정자는 없애라는 소극적 명령만 내릴 뿐 중국에까지 인맥을 터놓은 한명회를 어찌지는 못했다.

이때 대간들이 나섰다. 왕도 어찌지 못한 한명회에 대한 대간들의 탄핵은 열화와 같았다. 쏟아지는 탄핵상소 속에서 성종은 대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명회를 사헌부에서 추국하게 하였다. 추국 이후 한명회는 파직되었다.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것만 같던 한명회의 권세는 이 사건 이후 한풀 꺾여 들었고, 결국 한명회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누대에 걸친 권신의 끝간 데 모를 왜곡된 권세를 패기 있는 젊은 대간들이 누른 것이다. 이로써 성종은 왕의 권위를 되찾고 한명회 등 훈구 대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젊은 관료들과 새로운 정치를 열 기회를 얻었다.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개그콘서트>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최효종

대한민국이 '깔깔깔' 웃고 있다

“감사합니다” “애매~~합니다” “안돼”...

요즘 TV에선 개그 프로그램이 대세다.

각종 유행어를 탄생시키고 적절한 시사 풍자도 하면서 일부 개그맨들은 아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과 종편 채널에서도

개그프로를 경쟁적으로 편성,

개그맨들에겐 '시장'이 활짝 열린 셈이다.

글·이정혁 (스포츠조선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TV 개그프로 전성시대

요즘 <개그콘서트>를 안 보면 대화가 안된다. 지난해 최고의 유행어들을 만들어 낸 이 KBS 2TV의 개그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이다. 이를 놓치면,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뉘앙스를 제대로 잡아 내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그 프로그램 시청률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였다. 초등학교생들이나 일부 성인 남성들이 즐겨 보던 개그 프로그램에 이젠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도 없다.

프로그램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KBS 2TV엔 대표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외에도 <개그스타GCC어워드>(토요일 밤 12시15분 방송)가 있다. SBS <개그투나잇>(토요일 밤 12시 방송), MBC <웃고 또 웃고>(금요일 밤 12시25분 방송) 등이 각 지상파 방송의 대표 개그 프로그램이다.

또한 케이블(tvN의 <코미디 빅리그>)부터 지난해 말 개국한 중

합편성채널들까지도 이 열풍에 합류했다. <시사코미디 10PM>(TV조선), <개그시대>(채널A), <개그공화국>(MBN) 등이 춘철살인의 개그로 시청률을 올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개그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1999년 처음 전파를 타기 시작한 <개그콘서트>는 지난 한해 최고의 유행어 퍼레이드를 펼쳐 나가며, 20% 후반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88만원 세대의 목소리 대변

한때 방송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에 가까웠던 지난 한 해의 개그 돌풍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전문가들은 최근 개그의 트렌드가 현실 풍자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는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정치적 색깔이 짙은 <개그콘서트>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분석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다. 금기를 아슬아슬하게 넘

나들면서 소위 기존 권력에 대한 풍자를 날리는 개그맨들을 통해 보통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특히 오랜 불황의 늪에 시달리는 '88만원 세대'가 이들 개그 프로그램의 든든한 지원부대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김원효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 안돼!"를 외치는 순간 폭소를 터뜨린다. 말만 많고 사건 해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경찰 본부장 김원효에게 더욱 열광하며, 그가 쏟아내는 말도 안되는 대사들을 통해 진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최효종이 만들어 낸 '일수꾼' 캐릭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인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선거유세 때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 주면 된다는 등 이 사회 폐부를 제대로 풍자해 내면서 시원한 한방 웃음을 터뜨린다.

유행어 전파의 1등 공신은 SNS

개그맨들이 만들어 낸 유행어의 유통과정이나 속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단순하다. 이 과정에서의 1등 공신은 바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다. '초등학교생이 먼저 열광하고, 언론에서 반응을 보이고, 광고로 마무리된다'는 과거 유행어 탄생 과정이 요즘엔 통하지 않는다.

과거 개그맨들의 한마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요즘엔 해당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순간, 관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른다. SNS 세대에게 '사마귀 유치원의 "어렵지 않아요"'가 퍼져 나가는 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다. 오히려 기존 언론들이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허덕일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효종 김원효 박성호 조지훈 등은 웬만한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최효종은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누렸다. 최효종은 최근 한 연예프로그램에서 "고소가 인기에 불을 지폈다. 수입이 과거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힐 정도로 인기 상승곡선을 달리고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확 낮춘다

개정 세법 시행규칙 4월 시행... 당좌대출 이자도 6.9%로 인하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납부액의 1% 이하(현행 1.5% 이하)로 인하된다. 또 기업이 특수 관계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활용하는 당좌대출 이자율도 현행 8.5%에서 6.9%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개정 대상이 되는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좌대출 이자율 인화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규칙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2012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 2주택자이면서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대주택 비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해 지역문화 보존 및 진흥 사업을 지원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하고 자 적용하는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을 현행 8.5%에서 6.9%로 인하한다.
- 상표권 사용료, 영업권 등 공동 무형자산 사용료의 경우 기존 기준인 매출액 외에도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상시종업원 수(1,000명 미만) 계산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을 제외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인력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위·목욕시설을 추가한다. 자동차 시설은 이미 범용화된 시설로서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존 세액공제 대상 중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범용화 시설을 제외한다. 대신 고효율 변압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18개 시설을 신규 추가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이후 출품물 등을 조직위원회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신용카드 국세납부시 현행 납부세액(1,000만원 한도)의 1.5%를 한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납부세액의 1%로 인하한다.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3.7%에서 4%로 현실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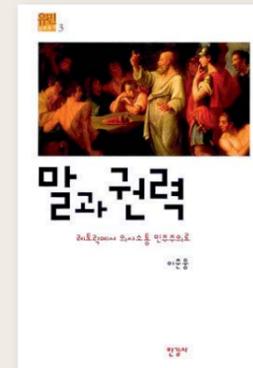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2013년부터 체납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해서 이를 통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성공할 경우 그 일부를 공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징수금액에 따라 2%, 4%, 8%, 10%의 누진 수수료가 적용된다.
-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업자 등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평가를 의뢰한 경우 건별 수수료를 6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2-2150-4111



말의 달인들이 힘쓰는 세상



말과 권력 | 이준웅 지음 | 한길사
584쪽 | 2만7000원

책 제목부터 눈길을 끈 데는 내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해진 우리 사회의 강연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이른바 '지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중강연 말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이 전국을 순회하며 바람을 일으킨 '청춘 콘서트'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그전까지 강단이나 서가에 갇혀 있던 지식이나 통찰이 강연자의 입을 빌려 직접 대중과 만난다는 점에서 '지식의 외출'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일시에 빠른 속도로 다수에게 전파되면서 하나의 정치적 힘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의 권력화'라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나꼼수'는 그 절정이라 할 것이다. '말과 권력'은 이 시대의 키워드다.

현대 정치 캠페인을 전공한 언론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고대 아테네의 말과 권력의 관계를 조명한다. 2500년 전 말의 달인이자 그 힘을 누렸던 소피스트들의 레토릭(rhetoric·수사법) 문화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꼼꼼히 탐색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던가. 크고 작은 민회조차도 언덕에 올라가서 주장했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소공동체에서 벌어진 말의 경연이었다. 적으면 5,000명, 많아도 1만 5,000~2만명 선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보다 말 잘하는 자가 영광을 누렸다. 그 어떤 천하장사라도 대중을 설득할 만한 웅변력이 없으면

지도자로서는 부적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말의 예술사'라 할 소피스트들은 저마다 빼어난 언변을 뽐내며 거룻고 심지어 돈을 받고 변론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제자들이 아테네를 이끌었다.

그런 점에서 레토릭은 오늘날 (나가수) 못지 않은 경연이었다.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레토릭에서는 두 명 이상의 논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근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평가는 민회와 평의회에 참석한 시민들 몫이었다.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공적 사안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말로써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레토릭 문화가 활성화되면 민주주의도 성공

레토릭을 핵심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채택한 의사소통 민주주의는 결국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판단하는 민주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와 참과 좋음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과 말을 섞지 않고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의견교환을 통해 남은 물론 나의 입장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참과 좋음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태도이다.

저자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성공 역시 레토릭 문화, 즉 경연적 말하기 문화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글·전병근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정부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개선안을 정부부처에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및 전담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민원을 접수·관리하는 시스템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스마트폰으로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韓세상' 앱 개발

본인의 청렴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이 개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개발해 보급하는 '청렴韓(韓)세상' 앱은 청렴도를 사용자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각종 체크리스트가 설계돼 있고, 자신의 부패의식을 진단해 보는 '부패의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청렴성식 테스트가 담겨 있다. '청렴韓세상' 앱을 다운받으면 실시간 뉴스 중 각종 대내외 부패와 관련된 뉴스나 청렴정책과 관련한 소식만 별도로 실시

민원조사관 현장방문 해결 1,000건 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2월 출범 이후 만 4년 만에 지역민원 현장을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을 통한 민원처리로 최근 1,000건의 민원해결 실적을 달성했다.

'이동신문고'는 매월 2박3일 일정으로 여러 분야의 민원조사관들이 팀을 이뤄 3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부터 이어 오던 지역민원처리 서비스다. 권익위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이동신문고를 통해 총 127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1월 말 현재 총 4,93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이 중 902건의 지역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현장조정'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등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시키는 것으로, 주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관계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출범 이후 100건(2011년 24회)의 집단민원을 이러한 현장조정 방식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해결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동신문고를 46개 지역에서 5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장조정 활동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각종 행동강령도 즉석에서 열람할 수 있다. 행동강령의 위반 사례나 공익침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청렴명언이나 역사속 청렴인물도 검색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부패사건을 신고하는 콜센터인 1386번으로 바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청렴韓세상'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청렴韓세상'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권익위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2, 3월 두 달 간 대전·인천·경기·광주·충북 등 5개 권역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비리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조정과 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탁대응매뉴얼 배포

공직자들이 업무 중 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권익위는 이럴 때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매뉴얼 <알선·청탁이 괴로워>를 제작, 배포했다. 매뉴얼은 청탁과 부탁의 구분 방법을 소개하고, 청탁 자가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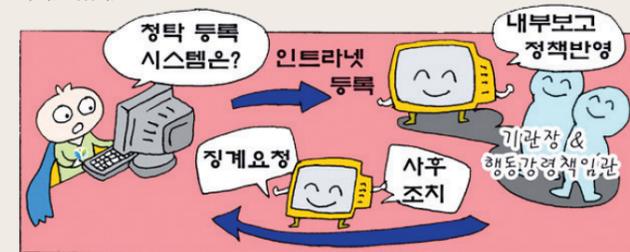


리스트 4단계를 제시하는 한편 청탁 주체와 내용별로 구분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문제 청취를 회피하는 등 청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고,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권익위는 1월 18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자침 전담회의'에서 이를 공개,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망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탁등록시스템 도입·운영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 도입한 자체 청탁등록제도에 따라 2012년 초 내부정보통신망에 등록시스템을 구축,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악성민원 해결 '최적'

권익위가 2011년 7월 정부부처 최초로 고질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발족한 이후 접수된 악성·반복민원 총 30건 중 19건을 처리, 이 중 10건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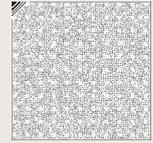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악성 및 고질 민원인이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팀으로, 경험 많은 조사관 3명이 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악성·반복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과 함께 현장 위주의 재조사를 추진하고, 민원인과 기관이 모두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끝장토론'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우수 해결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정부와 각급 지자체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이 접수한 특별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28명이 5년 동안 총 5,734건의 민원을 반복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당 평균 205건씩의 민원을 제출한 셈으로, 처리과정에 단일 건당 최고 20명의 조사관이 투입되는 등 평균 4.8명의 조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원 1건당 행정처리에만 최고 500시간이 소요되며, 약 474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등록시스템은 2011년 9월 8일 열린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에서 정부기관·공직유관단체 등 974개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사항으로 권익위가 다른 시범운영 기관과 함께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직원을 포함한 권익위의 모든 소속 공무원은 내·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받는 즉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등록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청탁자료가 등록되면 감사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위험요소를 가려내며, 문제가 있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예외적인 보상조치와 같은 특례를 요구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온정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은 모두 등록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 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3월 6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한국전에 참가했다 전사한 분의 유족에게 보상금 5,000원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한동안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예우하는 게 국가의 기본도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권익위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선수영·인천 부평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업그레이드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110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늘 믿음과 신뢰속에 110이 사람들의 깊은 사랑과 관심속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김휘곤·울산 북구)

<국민권익>을 읽고 있는 딸에게 뭘 보고 있냐고 물으니 K-POP 관련 기사를 읽고 있더라고요. 요즘 10대 아이들은 음악에 관심이 많다 보니 딸도 이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고 합니다. 딸이 기사를 읽더니 자기도 가수가 돼서 한류에 동참하고 싶대네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가수들과 한류에 대해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해외에 진출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책에 흥미로운 기사를 넣어 주면 아이들도 국민권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서희·전북 정수군)

<국민권익> 11·12월호를 읽고 83명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K-POP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독자분이 많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소개가 유익했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또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호 틀린그림찾기 정답



P U Z Z L E

	1		2		3
	4				
			5	6	
7					
		8			
9					

가로

-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복은?
- 본업 이외의 일을 해 얻는 수입.
- 조선시대,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해 이르던 말.
- 풍족하고 넉넉함. "그는 키도 크고 몸집도 OO했다."
-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끈고 깨끗한 관리를 이르는 말이죠.
-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OOO, 그렇고 말고, 네 말이 옳다."

세로

- 행정기관의 부정이나 비능률을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민원 처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기관이나 그 기구를 가리키는 용어는?
- 새로 입학한 학생.
- 괴롭고 어려운 심정이나 사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OO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기관입니다."
- 먼 거리.
-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

주소

.....

□□□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 1. 1 ~ 2012. 12. 31
서대문 우체국 제 631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1 2 0 - 7 0 5



01+02 2012 vol.24

'국민권익'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입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독자와 함께 하는 '국민권익'이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격려, 충고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는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드는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구독희망주소 :

E-mail 주소 :

(E-mail 주소를 적으신 분은 자동으로 정책고객으로 등록되며, 권익위 소식, 웹진 등을 보내드립니다.)

퍼즐

	1		2		3
	4				
			5	6	
7					
		8			
9					

가로

- 조선 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복은?
- 본업 이외의 일을 해 얻는 수입.
- 조선 시대,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해 이르던 말.
- 풍족하고 넉넉함. "그는 키도 크고 몸집도 OO했다."
-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를 이르는 말이죠.
-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OOO, 그렇고 말고, 네 말이 옳다."

세로

- 행정기관의 부정이나 비능률을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민원 처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 나 그 기구를 가리키는 용어는?
- 새로 입학한 학생.
- 괴롭고 어려운 심정이나 사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OO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기관입니다."
- 먼 거리.
-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

독자편지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보내주시 의견은 소식이 제책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www.acrc.go.kr